

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: 가계금융 · 복지조사를 중심으로

주택금융규제 완화와 두 차례의 금리인하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가계부문의 건전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

- 지난 7월말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두 차례의 금리인하로 인해 10월과 11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6년래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규모 증대에 대한 우려가 부각
-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DSR 악화 등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저소득층/고령층/자영업자들의 부채상황을 점검할 필요

저소득 차주의 가계부채 :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으로 부실이 현실화 될 가능성

- 소득 1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가구당 부채 규모는 다른 계층에 비해 작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, 동 비중은 2012년 430%에서 2014년 524%로 급증
- 해당 가구의 동 비중 급증은 가처분소득(3.2%)에 비해 부채 증가율이 확대(25.7%)되었기 때문
-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 접근성 문제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, 소득 1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의 약 70%를 원리금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등 원리금상환 부담이 큰 상황
- 특히 소득 1분위 부채보유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 가구의 DSR은 각각 118%와 100%로,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 소득1분위 가구 중 상당수는 가처분 소득만으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
- 이러한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은 연체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채무상환능력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, 향후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가계부채 부실의 현실화 가능성이 우려

고령층 차주의 가계부채 : 실물자산 매각 없이 부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

- 금융위기 이후 은퇴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큰 폭 증가했으나, 해당 계층의 경우 소득 증가율이 낮고 자금 용도 또한 주택구입 외 사업목적 등이라는 점에서 부실화 우려가 부각
- 주택담보대출 중 50대/60대 이상 차주의 비중(%): '09년 26.9/15.1 → '14.3월 31.0/19.7
- 50대 이상 차주는 실물자산 보유 규모가 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낮으나 실물자산 매각 없이 부채 상환이 취약(부채보유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: 50~60대 94.5%, 60대 이상 122.8%)
- 부채 상환 등을 위한 주택 매각 등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는 자산가격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

- 또한 50대 이상 차주의 자산 및 부채에서 실물자산과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커 상환 능력이 부동산 시장 여건에 민감하고, 만기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부채 구조가 타 연령층에 비해 취약
- 아울러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와 맞물려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향후 은퇴계층의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
 - 5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'07년 47.1%에서 '13년 57.1%로 급증

자영업자의 가계부채 : 소득 기반은 취약하나 부채 규모는 커 상환 불확실성이 증대

- 내수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며 부실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, 자영업자 부채 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(240%)은 상용근로자 수준(181%)을 크게 상회
- 한편 자영업자 자산은 상가 등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비중이 높고,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담보대출 비중 역시 커 상환능력의 부동산 시장 민감도가 큰 상황
- 또한 자영업자는 상용근로자 보다 부채 규모가 크고, 부채 보유가구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100%를 넘어서 보유자산 매각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(상용근로자: 82.6%)
 - 자영업자 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상용근로자 대비 1.3배인 1.19억원에 달함
-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은 비은행권 대출과 만기 일시상환의 비중이 높고, 다중채무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혼재되어 있어 정책당국의 관리가 어려워 향후 부실 관리에 집중적인 모니터링 필요
 - 특히 자영업자 가운데 중복대출 차주의 대출 규모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('11년 ~'13년 3월 중 중복대출 자영업자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각각 22.8% 16.8% 증가)

가계부채가 디플레 논쟁의 핵심인 점을 고려해 소득 증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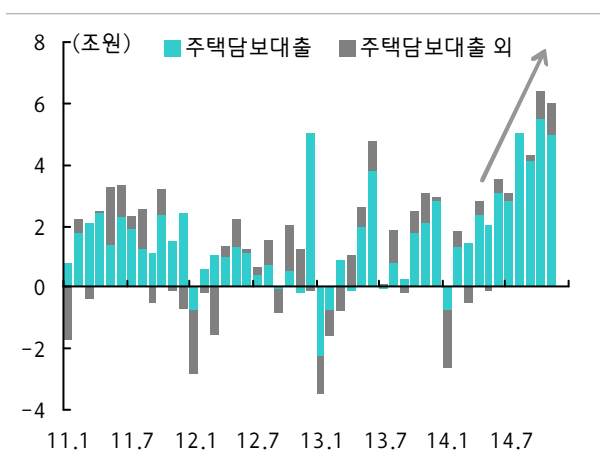
- 현 금리 수준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 문제도 리파이낸싱 과정을 거치며 상환을 상당부분 이연시키고 있어 아직 원리금상환 부담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상황
- 그러나 소득 1.2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DSR는 각각 68.7%와 36.9%를 기록하는 등 향후 과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, 회생 신청 등 극한 상황에 처하는 가구 증대가 불가피
- 또한 저신용 등급으로 하락하는 차주의 연령대 ·고용형태별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고령층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본격 부각될 전망
- 아울러 향후 금리 상승이나 원금 분할상환 본격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는 가계부문의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키며 장기 경기침체 및 디플레를 촉발할 가능성
 - 특히 취약계층은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고, 금리상승시 추가 이자상환 부담도 여타 계층보다 큼
- 또한 가계부채 증대와 부실화는 향후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켜 금융기관의 잠재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
- 특히 금리인하의 정책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소득 증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며,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대안 마련과 구조개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 노력이 필요

I. 서론

■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두 차례의 금리인하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가계부문의 건전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

- 7월말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두 차례의 금리인하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추이가 확대되며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6년래 최대폭 증가하며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부각
 -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(조원): 3.1('14.7월)→5.0(8월)→4.3(9월)→6.9(10월)→6.9(11월)
- 금융규제 완화 및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시중 유동성 또한 증가세가 확대
-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취약계층의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으로 대환해 주고,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부채구조의 개선 효과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추정
 - KCB에 따르면 신규대출을 받은 차주 중 카드론,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보유자의 신용등급 개선이 뚜렷
- 그러나 취약계층의 부채구조 개선과 더불어 저금리를 활용해 추가 대출을 받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부채 규모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
 - 주택금융규제 완화 전후 주담대 대출용도 비중(%):
최초주택구입 51%→ 47%, 전환대출 12%→ 11%, 추가대출 37%→ 42%
-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, 가계부채 규모 또한 급

그림1 |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담보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



주 : 은행권 가계대출은 모기지론 양도를 제외한 금액
자료 : 한국은행

표1 | 주택금융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

구분		변경전	변경후
LTV	은행/보험	수도권: 50~70% 기타: 60~70%	全금융권 전국: 70%
	비은행권	수도권: 60~85% 기타: 70~85%	
DTI	은행/보험	서울: 50% 경기, 인천: 60%	수도권: 60% 기타: 미적용
	비은행권	서울: 50~55% 경기 인천: 60~65%	

주 : DTI 산정시 장애인정소득 기간 확대(10년→60세까지 잔존기간) 포함
자료 : 기획재정부

증하는 상황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부문별 가계부채 점검이 필요한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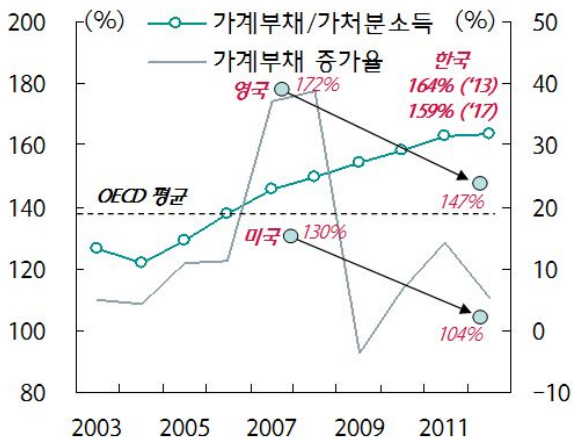
- 주택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권간 대환 대출 확대 등을 유도하고 있으나, 낮은 신용도로 인해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

■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과 더불어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(DSR)이 증가하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

- 금융위기 이전에는 정부의 전격적인 주택시장 규제 완화와 지방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가,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영업자 급증 및 생계형 자금수요 확대가 가계부채 확대의 주요인
 -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율은 164% 수준으로 기존 가계부실 경험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것과 달리 상승세를 지속
-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중과 가계부문의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, 국내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
 -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과 이자상환비율이 각각 85%, 2.5% 상회시 가계소비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미 동 비율을 2009년부터 상회하기 시작
- 원리금 상환시점 이연이 지속되며 부실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는 않으나, 국내외 실물 경제 둔화 및 원금상환 시점 도래시 가계부실 증대 우려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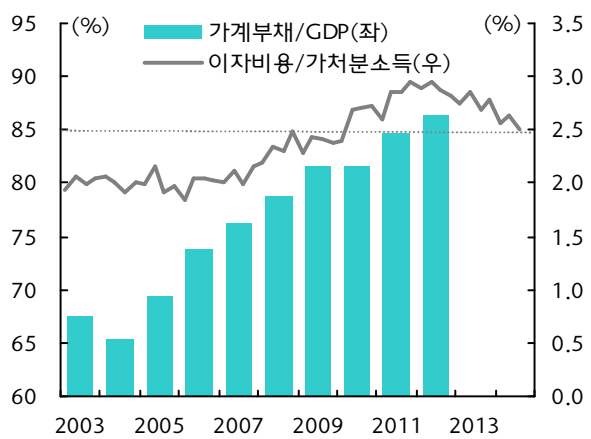
■ 가계금융 서베이 통계를 활용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들의 재무상황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부각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

그림 2 |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



자료 :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그림 3 | 가계부채 비율과 이자상환 비율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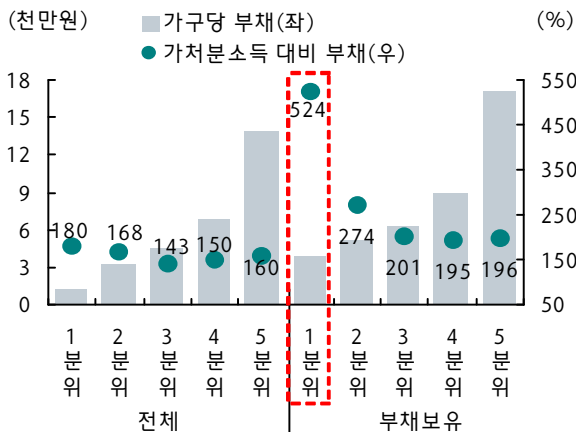
- 2010년 이후 연간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계금융 복지 행태조사를 통해 연령별, 소득별, 종사상 지위별 재무건전성 변화 등을 점검
- 또한 금융안정보고서의 가계부채 현황 파악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시계열 자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입체적 분석을 시도할 필요성 대두
 - 베이비부머 은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통계 부재
-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/고령층/자영업자들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점검과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부각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

II. 가계 유형별 취약계층과 리스크 요인

1. 저소득 차주의 가계부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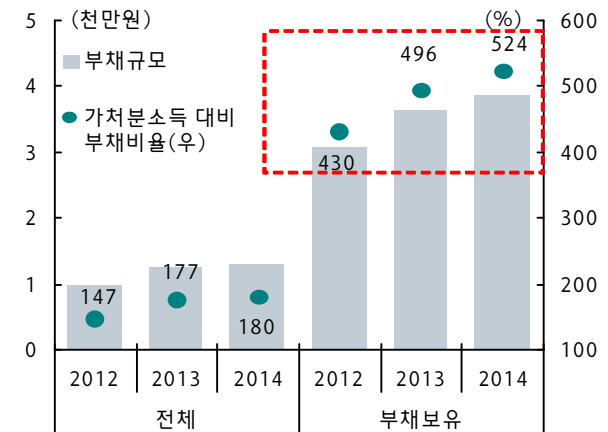
- 저소득 저신용 가구의 부채 문제, 소득 개선이 부진한 가운데 높은 금리수준 적용과 원리금 분할상환 도래로 심각성 본격 부각
- 연소득 3천만원 미만 가구의 대출잔액은 전체 가계대출의 31%를 차지하고, 소득1분위 계층의 가구당 부채 규모는 다른 계층에 비해 작지만,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

그림4 | 소득 분위별 부채 규모 및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



주 : 2014년 기준
자료 : 통계청

그림5 | 소득 1분위의 부채 규모 및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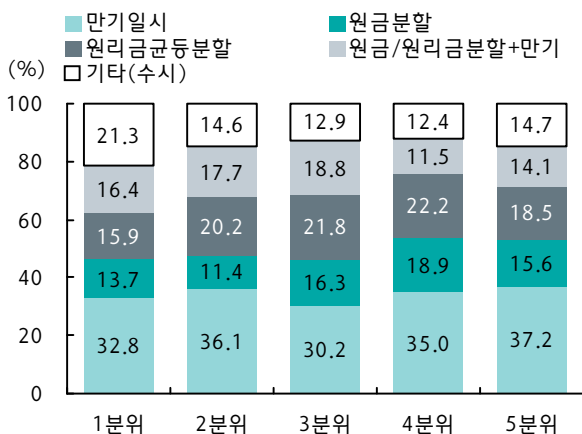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

- 소득분위별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(2014년,%): 1분위 180.2, 2분위 167.7, 3분위 143.2, 4분위 150.2, 5분위 160.0
- 특히 전체 가구를 부채 보유가구와 미보유 가구로 구분시 소득 1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524%에 육박
 - 부채보유가구의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(2014년, %): 1분위 523.8, 2분위 273.6, 3분위 200.9, 4분위 194.7, 5분위 195.7
- 또한 소득 1분위 가구의 부채규모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, 소득 1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2년 430%에서 2014년 524%로 급증
 - 소득 1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급증은 가치분소득 증가율('12년 대비 '14년)이 3.2% 증가에 그친 반면 부채 증가율은 25.7%나 증가한 것에 기인

■ 특히 부채를 보유한 소득 1분위 가구의 DSR(원리금상환액/가치분소득)이 70%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,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문제가 심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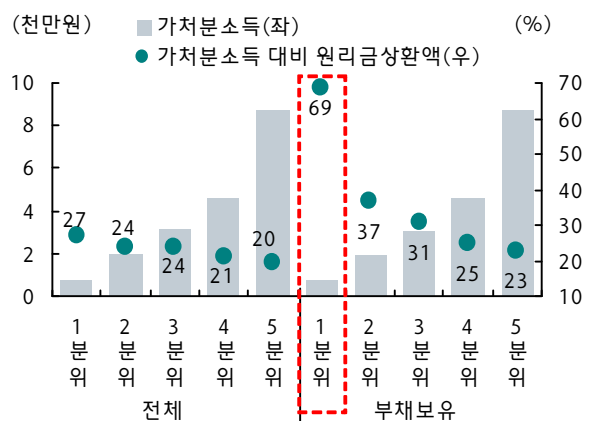
- 저소득 계층의 경우 신용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은행권에 비해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 원리금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 존재
 - 소득분위별 은행 외 기관의 대출 비중(% , 2014년): 1분위 45.8, 2분위 37.7, 3분위 31.8, 4분위 30.3, 5분위 19.4
 -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신용대출금리 비교시 동일 신용등급 차주라도 평균 2.5배 이상 금리 차이가 존재하며,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리격차는 확대
- 또한 저신용 계층의 경우 수시 상환과 원금/원리금 분할 상환 비중이 높아 DSR이 다

그림6 | 소득분위별 대출 상환 방법 구성 비교



주 : 2014년 기준
자료 : 통계청

그림7 | 소득분위별 가치분소득 및 원리금상환 부담



주 : 2014년 기준
자료 : 통계청

른 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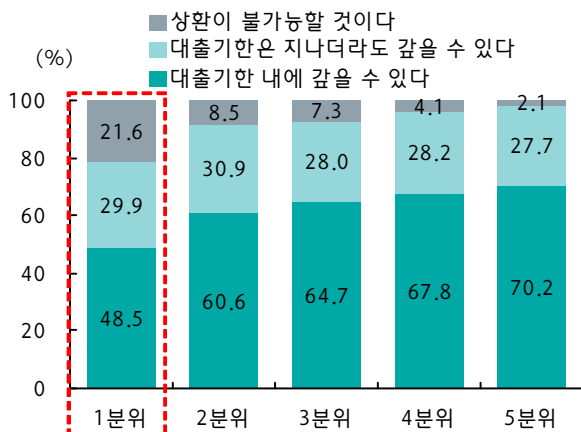
- 소득분위별 DSR(% , 2014년): 1분위 27.2, 2분위 24.3, 3분위 24.0, 4분위 21.2, 5분위 19.6

- 특히 부채 보유가구만을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, 소득 1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의 실질 비중은 68.8%로 연간 소득의 약 70%를 원리금상환에 사용
 - 한편 소득 1분위 부채 보유 가구 중 자영업자와 사용근로자의 DSR은 각각 118%와 100%를 기록
- 저소득층 대출의 급증 원인은 서민금융지원 확대도 존재하나, 생활형 차입 수요 증대가 가장 큰 요인

■ **시장금리 상승 및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는 향후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증대시킬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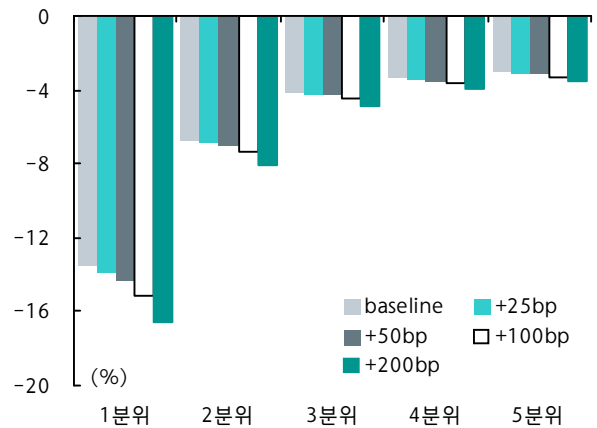
- 소득분위별 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볼 경우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21.6%가 상환이 불가능 할 것이라 대답
-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비은행기관 및 신용대출로 적용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경우, 적용 금리의 상승폭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
 - 저신용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은 연체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이들 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
-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1분위 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대되며 부채 상환 가능성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판단

그림8 | 소득분위별 대출 상환 가능성 조사 결과



주 : 2014년 기준
자료 : 통계청

그림9 | 소득분위별 금리 상승 시 소득 대비 이자수지 변화



주 : 부채 보유가구에 한함, baseline은 2013년말 기준
자료 : 한국은행

- 한은에 따르면, 시장금리 2% 상승시 소득 1~2분위 부채 보유 가구의 이자수지 부담은 소득 1분위의 경우 13.5%에서 16.6%로, 소득 2분위의 경우 6.7%에서 8.1%로 증가
-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대출 확대는 물론, 향후 금리 상승시 부채 상환가능성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점에서 부채 규모 증가 추이 역시 주시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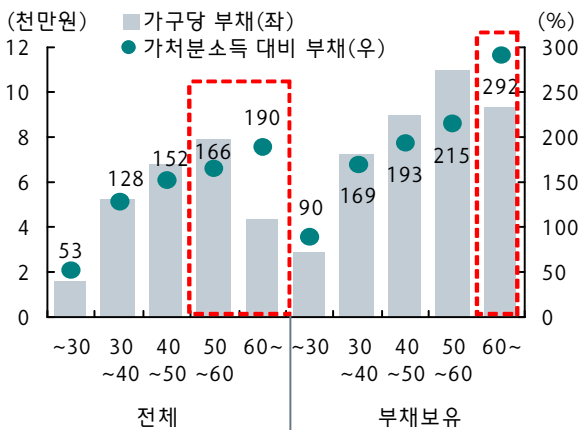
2. 고령층 차주의 가계부채

■ 주택금융규제 완화 이후 은퇴계층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큰 폭 증가하며 해당 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역시 부각

- 주택금융규제 완화 이후 은퇴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큰 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, 이들 계층의 소득 증가율 대비 부채증가율이 높고 해당 자금 용도 또한 주택구입 외 목적이라는 점에서 부실화 우려가 부각
 - 주택담보대출 중 50대/60대 이상 차주의 비중(%): '09년 26.9/15.1 → '14.3월 31.0/19.7
- 연령대별 가구당 부채 규모 점검시 50~60대의 부채규모가 가장 높고,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60대가 190%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
- 특히 부채 보유가구 한정시, 60대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300%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계층의 부채 상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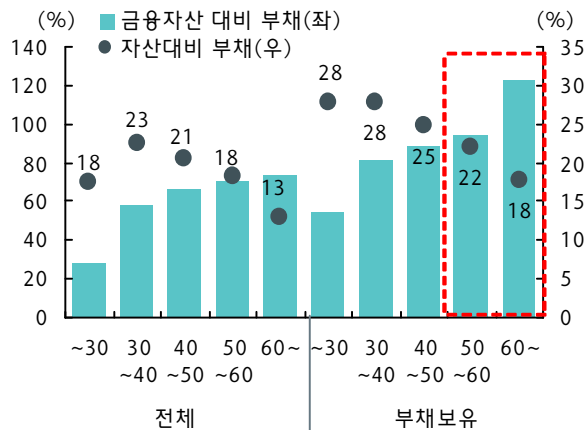
■ 50대 이상 가계의 경우 자산대비 부채 비중은 양호하나, 실물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계층에 비해 오히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

그림10 | 연령대별 부채 규모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



주 : 2014년 기준
자료 : 통계청

그림11 | 연령대별 자산 대비 부채와 금융자산 대비 부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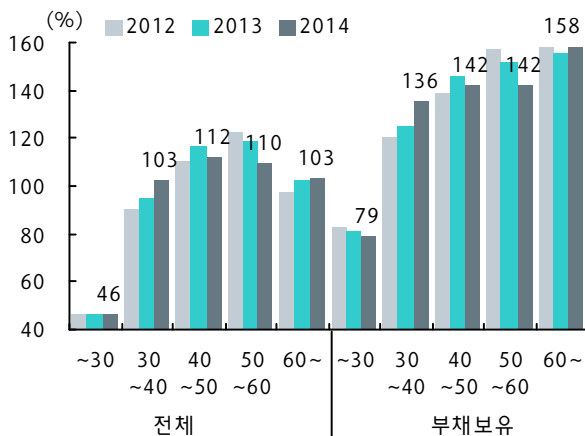
주 : 2014년 기준
자료 : 통계청

- 50~60대와 60대 이상 가계의 경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보유 규모가 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다른 연령층 대비 낮은 상황
 - 연령대별 실물 보유자산 규모(억원, 2014년)
30대 이하: 0.3, 30~40대: 1.4, 40~50대: 2.3, 50~60대: 3.2, 60대 이상: 2.8
 - 부채보유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(% , 2014년)
30대 이하: 27.9, 30~40대: 27.9, 40~50대: 25.0, 50~60대: 22.2, 60대 이상: 17.9
- 그러나 60대 이상 차주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고, 부채 보유 가구만을 분석시 격차가 더욱 확대돼 실물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계층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
 - 부채보유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(% , 2014년):
30대 이하: 54.7, 30~40대: 81.1, 40~50대: 88.7, 50~60대: 94.5, 60대 이상: 122.8
- 결국 부채상환과 노후 생활자금 마련 등을 고려할 때, 주택 매각 등을 통한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가 불가피해 향후 자산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

■ 50대 이상 차주 가구의 부채 구성은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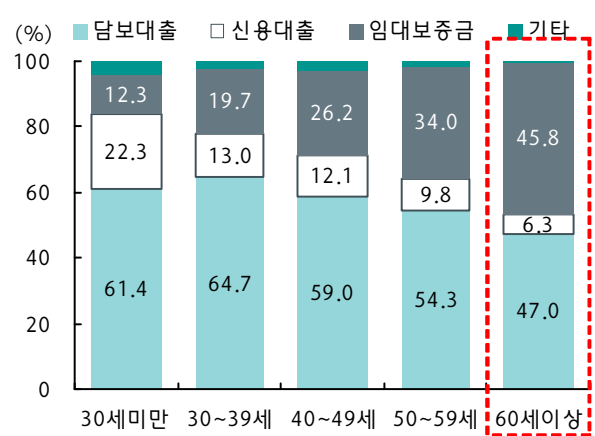
-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임대보증금(거주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이나 건물, 토지 임대시 받는 보증금)이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
 - 연령대별 전체 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(% , 2014년):
30대 이하: 12.3, 30~40대: 19.7, 40~50대: 26.2, 50~60대: 34.0, 60대 이상: 45.8
- 특히 60대 이상 가구의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한 수단으로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부채 구성에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6%에 육박

그림12 |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



주 : 2014년 기준
자료 : 통계청

그림13 | 연령대별 부채의 구성 비교



주 : 2014년 기준
자료 : 통계청

- 따라서 타 연령대 대비 50대 이상 차주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,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상대적으로 양호

- 부채보유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와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(% , 2014년):
30세 미만: 90/79, 30대: 169/136, 40대: 193/142, 50대: 215/142, 60대 이상: 292/158

- 다만 50대 이상 차주 가구의 자산 및 부채에서 실물자산과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상환 능력은 부동산 시장여건에 민감할 것으로 판단

■ 50대 이상 차주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타 연령층과 비슷하지만, 만기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

-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살펴보면, 50~60대의 경우 21.2%, 60대 이상의 경우 19.4%로 다른 계층에 비해 양호한 수준

-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(% , 2014년)
30세 미만: 12.3, 30대: 21.6, 40대: 23.4, 50대: 21.2, 60대 이상: 19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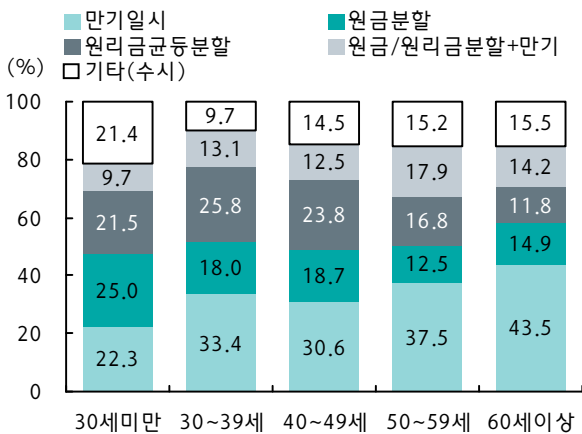
- 부채 보유 가구만을 대상으로 살펴볼 경우, 역시 50~60대와 60대 이상 차주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수준은 타 연령층과 유사

- 부채보유 가구 대상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(% , 2014년)
30세 미만: 19.2, 30대: 27.4, 40대: 27.7, 50대: 26.0, 60대 이상: 27.2

- 이는 50대 이상 가구의 부채 중 임대보증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, 해당 계층의 부채 중 만기상환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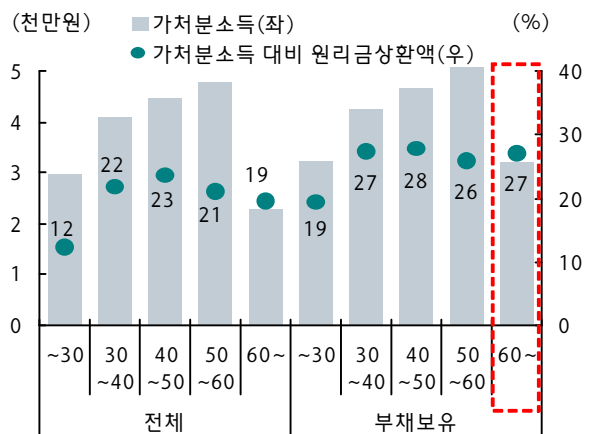
- 전체 금융부채 중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(% , 2014년)
30세 미만: 22.3, 30대: 33.4, 40대: 30.6, 50대: 37.5, 60대 이상: 43.5

그림14 | 연령대별 대출 상환 방법 구성 비교



주 : 2014년 기준
자료 : 통계청

그림15 |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



주 : 2014년 기준
자료 : 통계청

- 과거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00년대 중반, 40~50대를 중심으로 차입을 통한 주택구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의 경우, 원리금 분할 상환보다는 금리하락 과정에서 리파이낸싱이 활성화되며 만기 일시상환 형태를 지속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
 - 또한 50대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 기반 및 연령 등의 문제와 더불어 자영업 진출 등에 따른 대출시 분할상환 유도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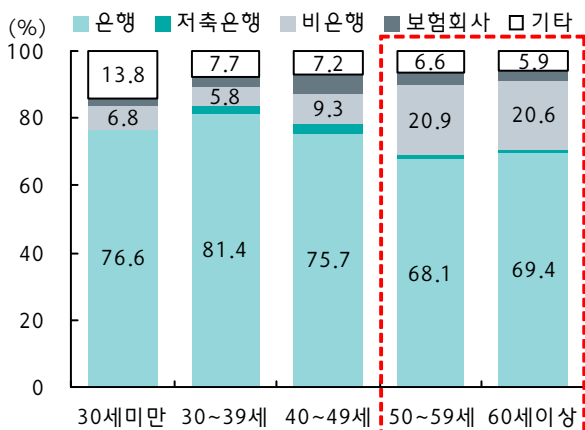
■ 만기 일시상환과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 고령층의 부채 구조는 타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

- 50대 이상 차주의 부채는 만기 일시상환과 일부 만기상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만기도래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등 구조적으로 취약
 - 연령대별 금융부채 중 원리금 균등분할과 원금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중(% , 2014년)
30세 미만: 46.5, 30대: 43.8, 40대: 42.5, 50대: 34.7, 60대 이상: 26.7
- 특히 50대 이상 차주의 은행권 대출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, 이자비용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, 이자상환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
 - 연령대별 전체 대출 중 은행 외 기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(% , 2014년)
30세 미만: 23.4, 30대: 18.6, 40대: 24.3, 50대: 31.9, 60대 이상: 30.6
- 특히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50대 이상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 기준 31.1%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

■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 및 자영업 진출 확대와 맞물려 향후 은퇴계층의 가계 부채 부실화될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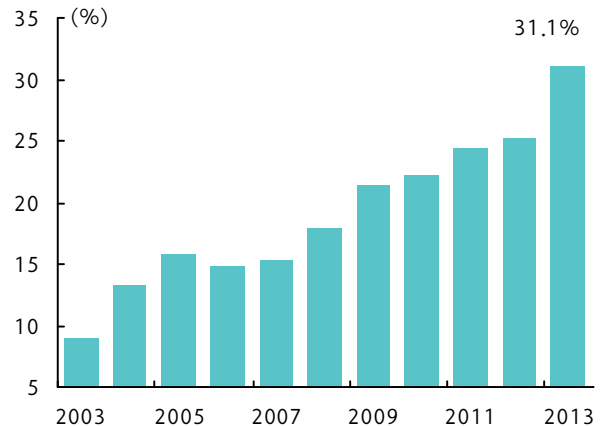
-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와 맞물려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

그림16 | 연령대별 대출 기관 구성 비교



주 : 2014년 기준
자료 : 통계청

그림17 | 50세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중



자료 : 한국은행

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

- 주택담보대출 중 50대/60대 이상 차주의 비중(%): '09년 26.9/15.1 → '14.3월 31.0/19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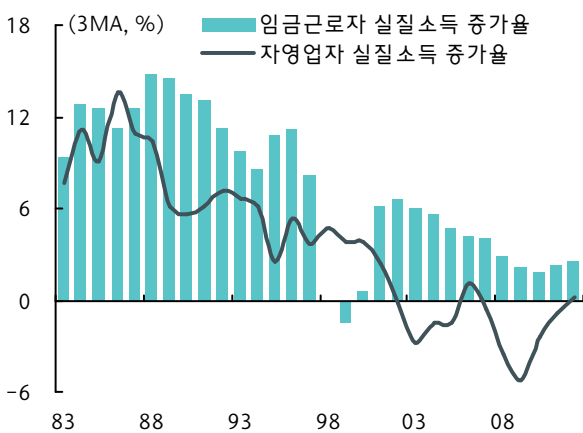
- 50대/60대 차주의 대출 용도는 사업자금과 거주주택 마련 비중이 각각 34.2%/31.7%, 29.2%/29.5%를 기록
- 또한 자영업자 중 55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0년 27.2%에 비해 2012년 38.8%로 급증했으며, 2011년~2013년 3월중 베이비부머 세대 자영업자 대출(은행 가계·기업 대출)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의 30% 내외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

3. 자영업자의 가계부채

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며 자영업자 부채문제가 가계부채 문제의 중심축으로 부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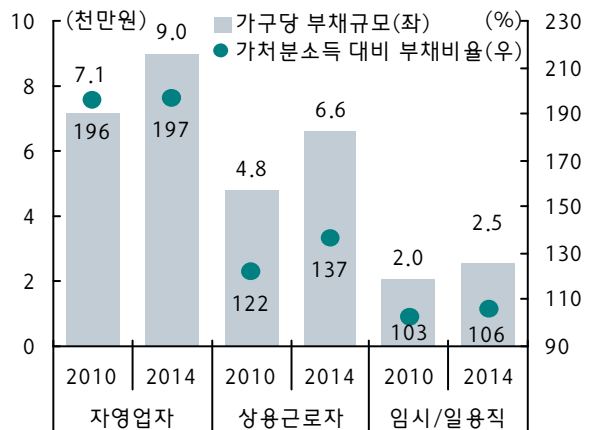
-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영위 업종의 영세성 등에 따른 소득 창출 부진으로 평균 생존률이 낮고 경기민감도가 높은 산업(음식, 숙박, 소매업, 부동산 임대업 등)에 집중
 - 자영업자의 소득증가율이 상용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을 장기간 하회하는 가운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 능력도 취약한 상황
- 자영업자의 부실 가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, 2014년 자영업자 부채 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40.0%로 상용근로자 수준(181.3%)을 크게 상회
 - 종사자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(%), 2014년): 자영업자 197, 상용근로자 137

그림18 |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실질소득 증가율 비교



자료 : 한국은행

그림19 | 종사자별 부채규모 및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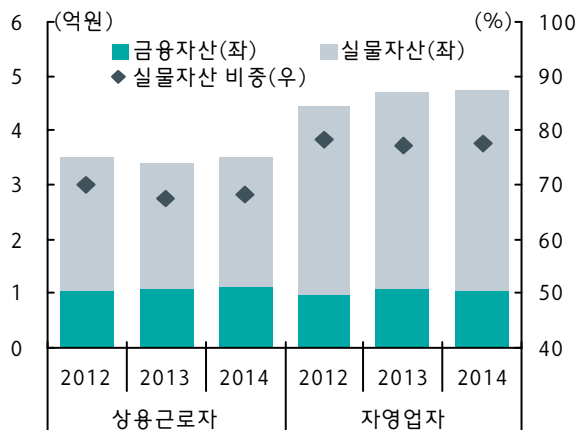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

-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을 낀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으며, 최근 은행/비은행으로 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해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
 - 특히 중복대출 자영업자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잠재부실률(연체 차주의 대출액/총 대출액)도 상승('10년말 3.4% → '13.6월말 4.1%)
- 향후 내수침체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진 지속시, 자영업자의 채무부담능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에 따라 부채보유 자영업자의 재무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

■ 자영업자의 평균 자산 규모는 상용근로자 보다 크나,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 시장 여건에 민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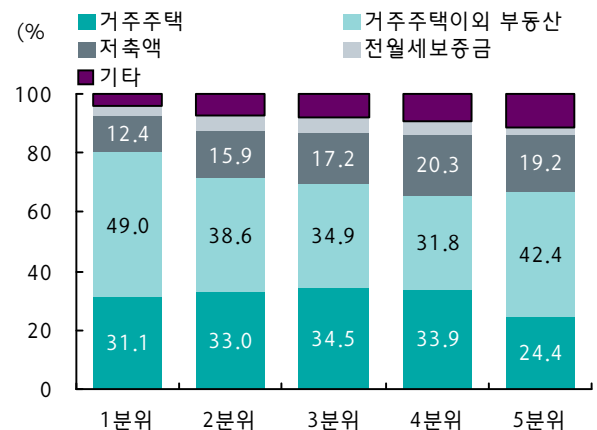
- 2014년 자영업자의 평균 자산은 4.73억원으로 상용근로자 3.51억원의 1.35배 수준으로 이는 거주주택외의 사업용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큰 것이 주요인
- 또한 자영업자의 자산 중 저축과 전월세보증금 비중은 상용근로자 대비 낮은 반면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, 자영업자는 부동산 시장여건에 더 민감한 것으로 판단
 - 자영업자/상용근로자 자산 내 비중(% , 2014년)
: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39.4/25.8, 거주주택 29.0/38.5, 저축액 3.7/21.9, 전월세보증금 18.5/10.1
- 2014년 자영업자의 부동산자산 규모 증가율(1.23%)은 상가 등 국내경기에 더 취약한 실물자산 보유 등으로 인해 상용근로자의 증가율 4.78%를 크게 하회
 - '11~'14년 연평균 부동산 자산 규모 증가율은 상용근로자 3.95%, 자영업자 0.62%
 - '11~'14년 연평균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규모 증가율 : 자영업자 1.06%, 상용근로자 5.09%

그림20 | 종사자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



자료 : 통계청

그림21 | 자영업자의 자산 구성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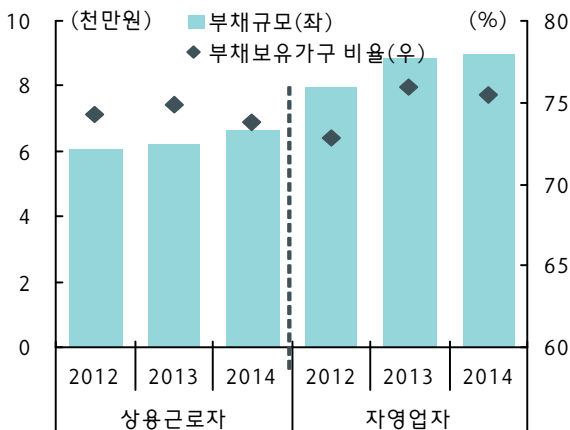
주 : 2014년 기준
자료 : 통계청

- 특히 자영업자 소득 1분위의 경우, 상가 등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비중이 타 소득계층에 비해 높아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기 여건에 취약한 것으로 추정
 - 자영업자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영업자의 상당부분이 주로 50대 이상의 은퇴세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용근로자 대비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추정
 - 자영업자 각 소득 계층의 자산에서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(% , 2014년): 1분위 49.0, 2분위: 38.6, 3분위: 34.9, 4분위: 31.8, 5분위: 42.4

■ 자영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해 부채 규모 및 부채 보유가구 비율이 크며, 담보부 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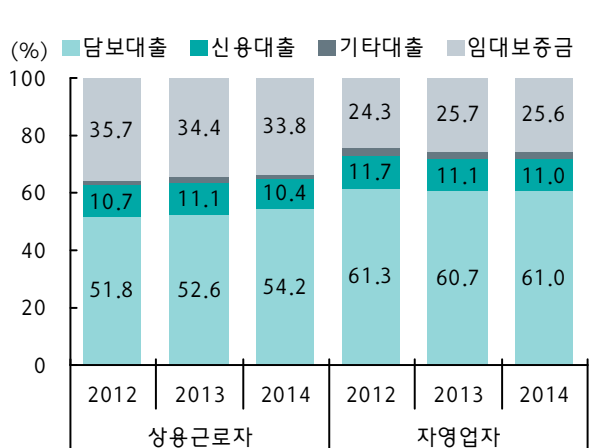
- 금융위기 이후 은퇴 가구의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며 자영업자의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이 상용근로자의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을 상회
 - 자영업자/상용근로자 부채보유 가구 비율(%): 69.6/67.6('10년) → 74.2/70.6('11년) → 72.9/74.2('12년) → 75.9/74.9('13년) → 75.5/73.8('14년)
- 또한 2014년 자영업자 전체 평균 부채 규모는 상용근로자 대비 1.4배인 0.90억원이고 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상용근로자 대비 1.3배인 1.19억원에 달함
 - 자영업자 평균 부채 규모(억원): 0.85('11년)→0.80('12년)→0.89('13년)→0.90('14년)
- 담보 및 신용대출의 용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는 사업자금 마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상용근로자는 거주주택 마련이 주목적
 - 대출용도별 비중은 상용근로자는 거주주택(47.7%), 거주주택이외(17.9%)가 가장 많고 자영업자는 사업자금 마련(49.5%), 거주주택(24.2%)이 가장 많음

그림22 | 종사자별 부채 규모와 부채보유가구 비율



자료 : 통계청

그림23 | 종사자별 부채의 구성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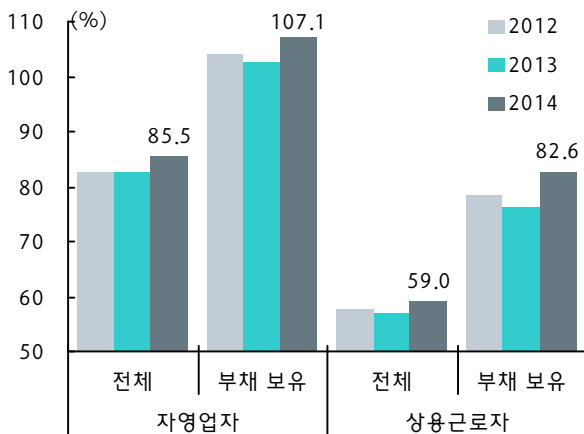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

- 한편 자영업자의 부채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(54.2%)에 비해 높은(61.0%) 반면 임대보증금 비중은 낮음
 - 상용근로자의 경우 거주이외 주택의 임대로 인해 자산 중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음(33.8%)
- 아울러 자영업자의 소득분위별 부채 구성 비중을 보면 담보대출 비중이 소득 1분위(61.4%)의 경우 소득 2/3분위(50.7%/59.7%)에 비해 높아 부동산 시장이 부채 상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
 - 반면 상용근로자 중 고소득자의 경우,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보유와 더불어 임대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부채중 임대보증금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감소하는 특성

■ 자영업자 재무건전성, 소득개선 부진과 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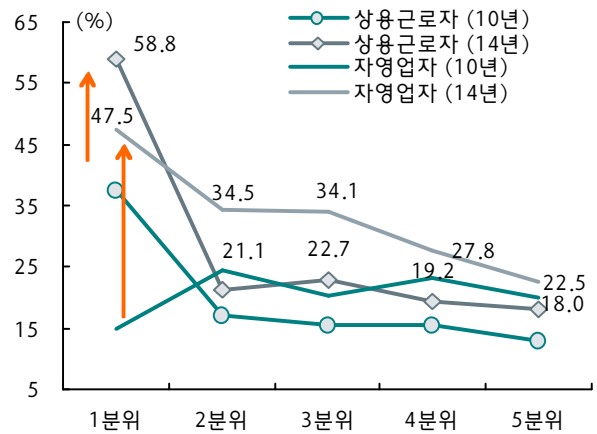
- 실물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/금융자산 비율의 경우 자영업자는 85.5%로 상용근로자 59.0%를 수준
 - 이는 두 집단의 금융자산 규모(자영업자: 1.05억원, 상용근로자: 1.12억원)는 비슷하나, 총부채규모(자영업자: 0.90억원, 상용근로자: 0.66억원)의 차이가 큰 것에 기인
- 특히 부채 보유가구만을 분석할 경우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107.1% 수준으로 보유자산 매각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
- 또한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 모두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하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
 - 부채 보유 상용근로자/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중(%): 78.5/103.9('12년) → 82.6/107.1('14년)
- 더욱이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자영업자 소득 증대가 제한된 가운데 원리금상환액 부

그림24 | 종사자별 금융자산 대비 부채



자료 : 통계청

그림25 |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



자료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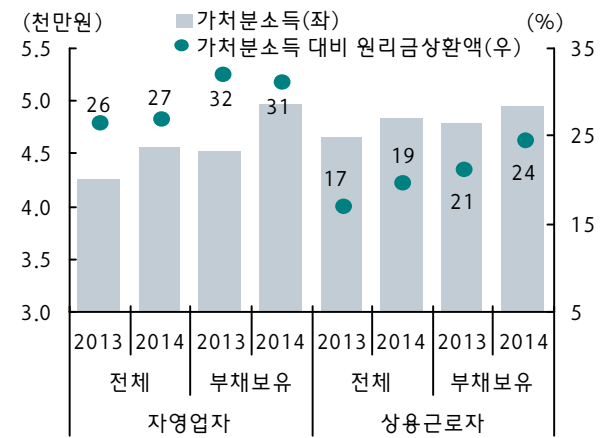
담이 증가함에 따라 DSR 상승폭이 상용근로자와 비교할 때 큰 상황

- DSR(%). '10년→'14년): 자영업자 21.0 → 26.9, 상용근로자 : 14.4 → 19.5
- 근로자 가구/근로자의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(%) : 0.7/5.7('10년)→ 1.4/0.9('11년) → 3.9/3.6('12년) → 1.4/-1.5('13년)

■ 자영업자 대출은 비은행권 대출과 만기 일시 상환의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한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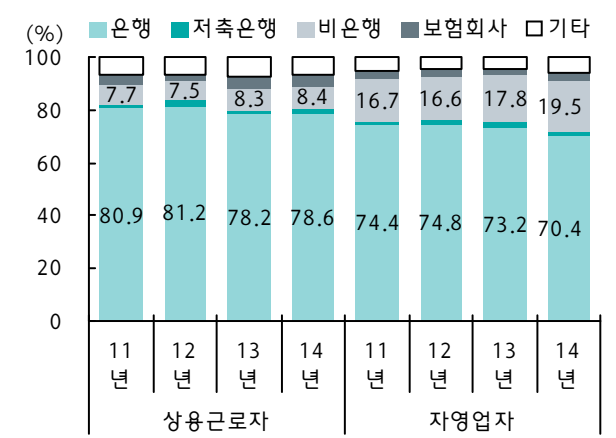
- 대출 기관별 비중에서 상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은행과 저축은행 비중은 은행권 중심의 규제가 강화되었던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(2011년 6월) 등의 영향으로 감소
 - 상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은행권 대출 비중(%) : 80.9/74.4('11년) → 78.6/70.4('14년)
- 특히 소득개선 부진 및 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의 신용도 하락, 은행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자영업자 및 상용근로자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증가하며 이자 비용 부담이 증대되었을 가능성
- 또한 금융권내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해 향후 이자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높으며, 비은행금융기관을 낀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
 - 특히 중복대출 자영업자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잠재부실률(연체 차주의 대출액/총 대출액)도 상승('10년말 3.4% → '13년 6월말 4.1%)
-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(은행 가계대출 기준)은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상업용 담보대출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환방식 중 일시상환과 원금/원리금분할+일부 만기상환 비중이 높아 만기도래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등 구조적으로 취약

그림26 | 종사자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



주 : 2014년 기준
자료 : 통계청

그림27 | 종사자별 대출기관 비중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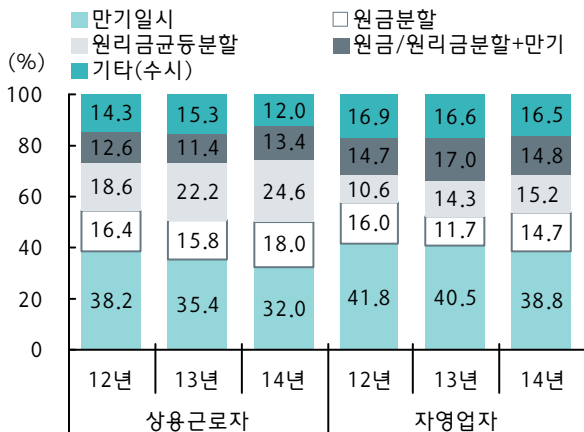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

- 다만 대출 상환 방식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만기일시 상환 비중은 정부의 고정금리 및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의 유도 등으로 감소 중
 -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원금상환대출 비중(%): 38.2/41.8('12년) → 32.0/38.8('14년)

■ 자영업자의 은행 및 비은행권의 다중채무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혼재되어 있는 점은 향후 자영업자 부채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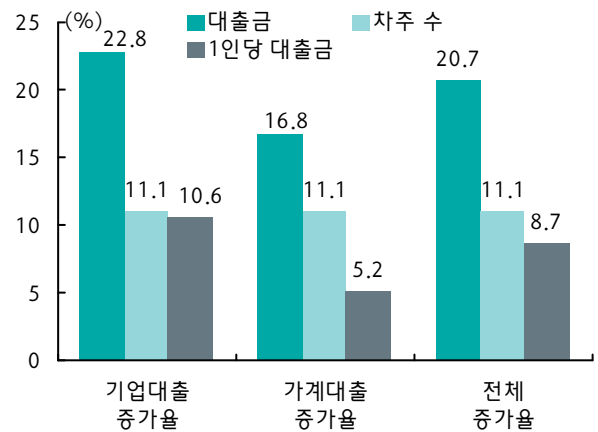
- 한은에 따르면 '13.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450조원 수준으로 은행권 대출이 285조원,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166조원으로 추정
 - 대출 유형별로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각각 245조원, 206조원으로 추정
- 자영업자 중 은행 또는 비은행권으로부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동시에 받은 중복대출자 대출 규모는 281조원으로 그 중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163조원, 118조원
- 특히 자영업자 가운데 중복대출 차주의 대출 규모가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는데, '11년 ~'13.3월중 중복대출 자영업자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각각 22.8% 16.8% 증가
 - 자영업자 대출 규모, 은행/비은행 및 가계/기업대출 형태로 450조원 수준 추정

그림28 | 종사자별 대출 상환방식 비교



자료 : 통계청

그림29 | 중복대출 자영업자 관련 주요 통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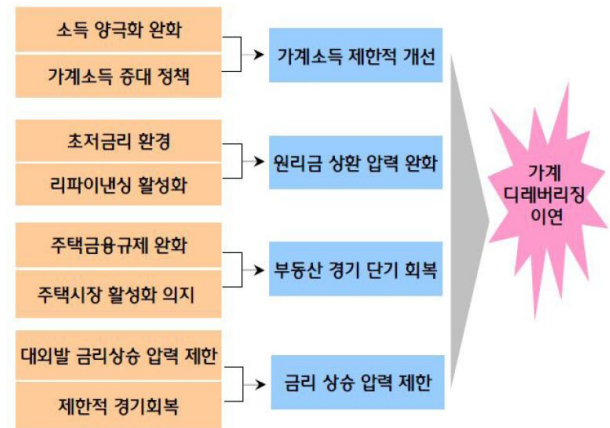
주 : 중복대출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동시 보유. 2011년~2013년 3월중
 자료 : 한국은행 부문검사 자료

III. 시사점

1. 금융권 리스크 관리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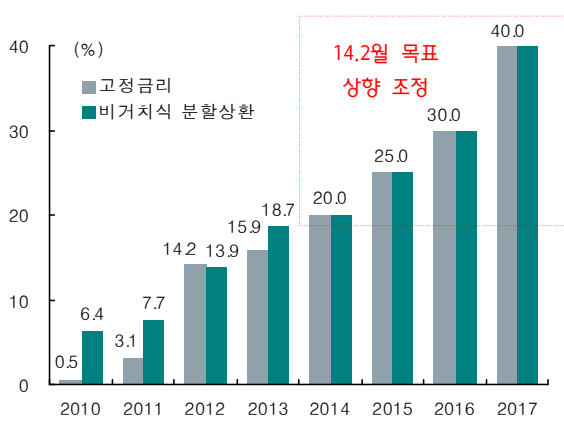
- 국내 가계부채의 구조나 현 금리 수준 고려시, 단기간에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 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은 사실
 - 현 금리 수준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 문제도 리파이낸싱 과정을 거치며 상환을 상당부분 이연시키고 있어 아직 원리금상환 부담이 본격화 되지는 않은 상황
 -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약 30%만이 원리금 분할상환이 진행중이며, 상호금융권은 원리금 분할 상환비중이 1% 수준에 불과해 분할상환 비중 확대시 건전성 문제 부각 가능성 존재
 -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중이나 선순환 여부는 불투명
 - 이미 과도하게 증가해 버린 부채 규모로 인해 원리금 분할상환에 들어가는 순간, 현금흐름에 부담을 느끼며 소비 등 여타 경제활동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
 - 향후 금리 상승이나 원금 분할상환 본격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는 가계부문의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키며 장기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
 - 소득 1분위, 고령 가구, 자영업자 등의 경우, 타 계층 대비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고, 금리 상승시 추가 이자상환 부담도 여타 계층보다 큰 상황

그림30 | 가계 디레버리징 위험은 단기적으로 완화



자료 :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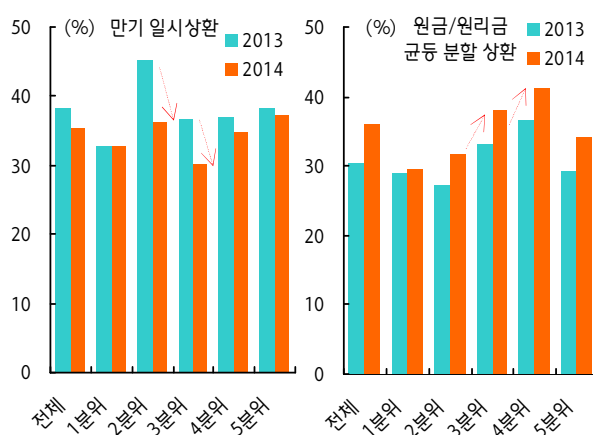
그림31 | 고정금리 · 비거치식 대출 비중 추이



자료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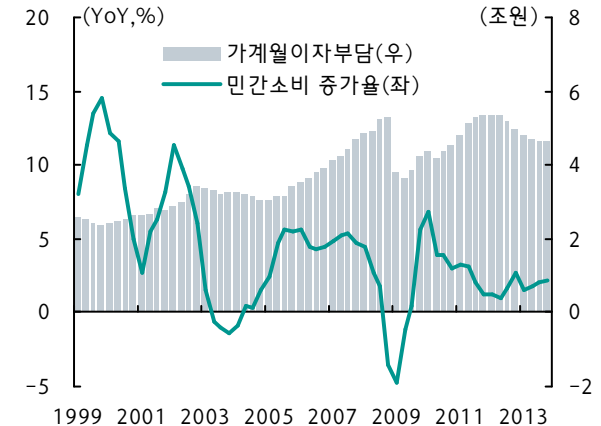
-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장기간 수요부진으로 이어지며 물가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,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플레 논쟁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
- **가계부채 증가세 지속, 소득개선 부진, 부채구조 전환 등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DSR이 급증하며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의 악순환 과정이 진행되는 가계 비중이 증가**
 -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금분할상환 비중 증가가 현실화되며 재무건전성 악화 현상이 현실화
 - 2014년 조사 결과, 전년 대비 자산증가율은 2.1%에 그친 반면 부채와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각각 2.3%와 18.1% 증가
 -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'가계부채 상황이 불가능할 것이다'라고 응답한 비율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저소득층, 고령층,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경고음이 본격 부각
 -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가계수지 흑자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, 노후자금 마련, 전월세 증가 등의 이유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
 - 가계 평균 소비성향/가계흑자율(05~10년 평균→13~14년 평균, %): 77.2/22.8→73.6/26.4
 - '14년 기준 소득 1분위와 2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DSR은 각각 68.7%와 36.9%를 기록하는 등 과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, 회생 신청 등 극한 상황에 처하는 가구 증대가 불가피
 - DSR이 40%를 상회할 경우, 상환능력 대비 과다 채무를 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채무상환 능력이 의심돼 금융권으로 부터 신용제약이 강화될 가능성 존재

그림32 |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



자료 : 통계청

그림33 | 민간소비 증가율과 가계 이자비용



주 : 이자부담률 = 전금융기관 대출이자/연소득
 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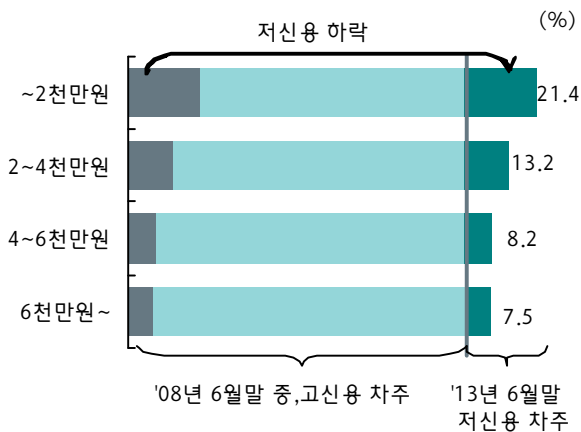
■ 금융위기 이후 중신용 등급의 차주가 저신용 등급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증가해 가계부문의 신용 제약 현상이 본격화될 경우 부실 확산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
- 금융위기 이후 고·중신용 차주 중 저소득 또는 소득창출 여건 악화로 인해 5~6등급 차주의 평균 25.2%가 저신용등급으로 하락
 -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군으로 하락한 차주의 신용등급별 비중 : 5등급 28%, 6등급 44%
 -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차주의 21.4%, 2~4천만원 차주의 13.2%가 저신용자로 하락
- 특히 저신용 등급 하락 차주의 연령대·고용형태별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고령층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본격 부각될 전망
 - 20대는 무직 비중이 49.3%, 60대 이상은 자영업 비중이 37.0%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아 경기회복 지연 및 청년실업 개선 부진시 이들 계층의 신용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
- 또한 명예퇴직(30~40대 퇴직) 후 자영업으로 전환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여타 차주 대비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, 내수부진 장기화시 가계부문의 부실 확산 불가피할 전망

■ 대외발 금리상승 위험 확대와 전월세가 상승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는 중대는 가계 재무건전성의 추가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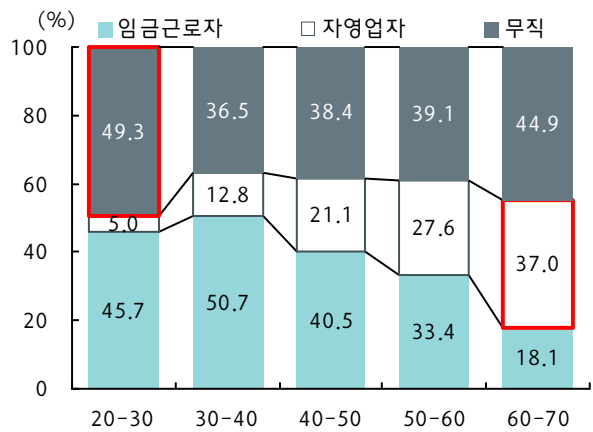
- 국내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, 금융완화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규모 가계부실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
- 그러나 중 국내경기 개선과 더불어 美 연준의 금리인상 논의 본격 부각에 따른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가계부문의 이자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

그림34 | 소득구간별 저신용 하락률



자료 : 한국은행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그림35 | 저신용 하락 차주의 연령/고용형태별 비중



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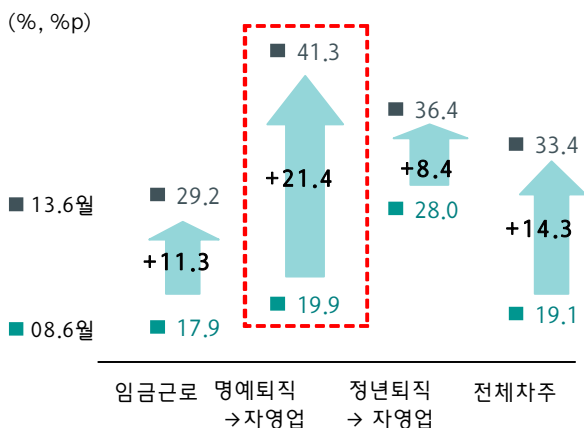
- 최근 美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, 조기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, 고용시장의 개선세 지속 등으로 금리인상 논의가 본격 부각되며 글로벌 차원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존재
- 더구나,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과 주택 실수요층의 주거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점은 가계 재무상태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

2. 정책 측면의 시사점

■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,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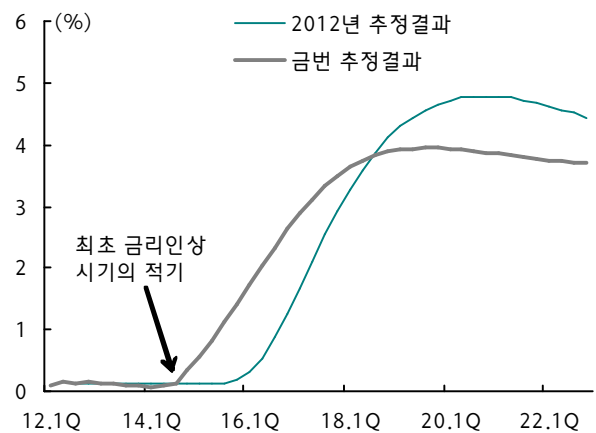
- 고금리 대출의 전환 기회 확대와 주택거래 확대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,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잠재부실 우려가 증대되고 통화정책 운신폭 축소 등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
- 가계부채 문제는 자영업 의존도 심화, 노후 생활대책 부족 등 가계의 취약한 소득 기반과 전세가 상승 등의 주거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, 각 유형별 원인 및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근거로 다각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
 - 증가원인 및 현황에 기반하여 부채유형에 따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자금용도, 차입자, 담보유무, 대출기관 등 기준에 따른 원인과 대응방안을 마련
- 특히 은퇴 도래 베이비부머들의 사업자금에 활용될 경우 가계소득의 자영업 의존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, 생애주기 상 주택담보대출 상황이 요구되는 고령층 가구의 가

그림36 | 고용형태 변화별 평균 DTI



자료 : 한국은행

그림37 | 최적통제 준칙으로 추정된 연준의 최적 금리 경로



자료 : Fe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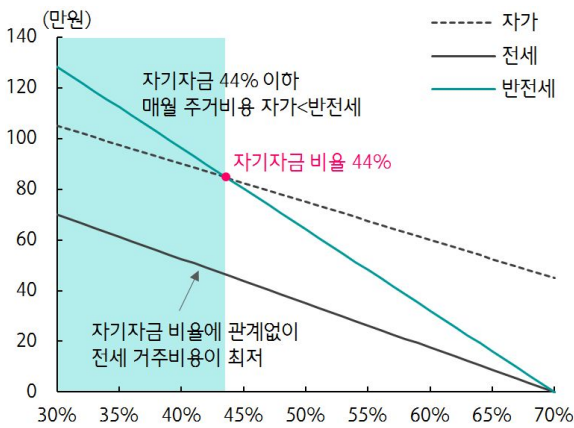
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에 대비할 필요

- 주택담보대출의 상당부분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마련에 충당되고 있어, 주택구입이 확인된 경우나 기존대출 대환에 제한하여 변경된 규제 적용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
-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유도하되 원리금 분할상환 납부로 인한 급격한 부담 증대가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
 - 저금리 환경하에 분할상환대출 확대를 통한 자발적이고, 점진적인 부채축소를 유도할 필요

■ 최근 부각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논쟁의 본질은 가계부채 문제에 기반하고 있어, 가계부채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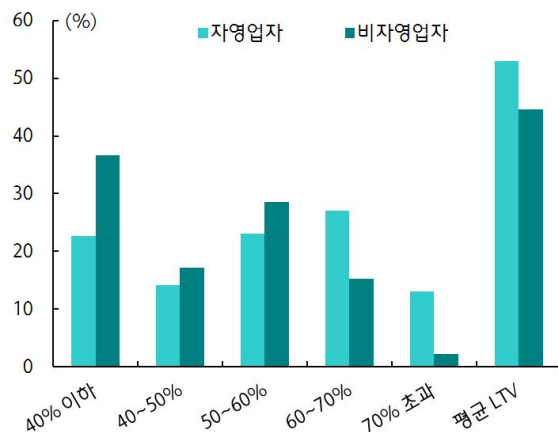
- 최근 디플레 논쟁의 기반이 된 공급측면의 물가하락 압력은 저성장 저물가의 환경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된 측면이 존재하나,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디플레의 근본 배경은 수요 부족에 기반한 물가하락이라는 점 고려시 소비여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
 - 2012년 조사 결과, 원리금 부담 증가시 가계지출을 줄이는 항목은 저축(19.3%)보다는 식품/외식(38.8%), 레저/여가/문화(26.1%), 의류구입(7.4%), 교육(5.4%) 등 소비비중이 높음
-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재정건전성 확보 중요성 부각에 따른 균형재정 정책 유지를 위해 민간주도의 부채 의존형 성장모델의 추구한데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며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며 소비여력 약화
 - 금융위기 이전 주택경기 호황과 맞물려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금순환

그림38 | 자기자금 비율에 따른 거주유형별 주거비용 예시



주 : 주택가격 5억원, 전세가/매매가 비율 70%, 주담대 대출금리 3.6%, 전세대출금리 4.2%, 전월세전환율 7.7%, 반전세의 경우 자기자금과 동일한 월세 보증금 활용하고, 부족분 월세화 가정
 자료 :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그림39 | LTV비율 분포별 주택담보대출 차주 비중



주 : 2013.6월말 기준
 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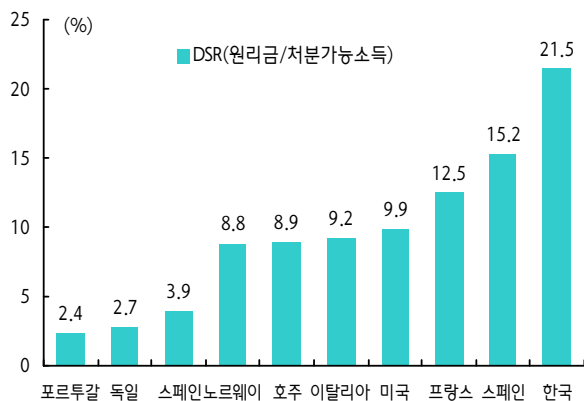
표상의 가계금융부채 기준으로 약 500조원 가까이 증가

- 2014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, 국내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을 나타내는 DSR는 21.5%를 기록하며 주요 OECD 국가들의 수준을 크게 상회
 - 부채보유 가구만을 대상으로 DSR을 산정시, 소득 하위 60% 가구의 경우 모두 30%를 넘어 (1분위 69%, 2분위 37%, 3분위 31%)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
- 특히 가계금융부채의 약 45%를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0%만이 원금분할 상환을 하고 있고, 사상 최저 수준인 시중금리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높은 DSR 수치는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확산될 수 있는가를 반증

■ **금리인하를 통한 정책여력 소진 보다, 소득 증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중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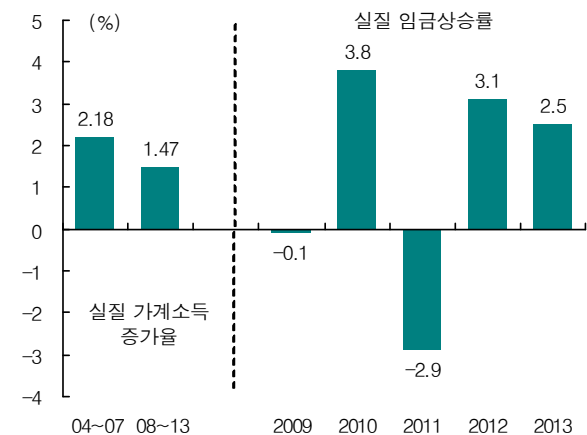
- 2013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전년대비 4.4% 증가했으나, 소비지출은 0.2% 증가에 그쳐 부채상환, 노후 대비 등의 구조적 요인이 가계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
- 성장률을 하회하는 가계소득 증가율과 기업과 가계 간의 소득 재분배 문제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악순환을 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
 - '01년 이후 연평균 명목 성장률은 6.5%를 기록한 반면 명목임금 상승률은 5.0%('01~'07년 7.1% → '08~'13년 2.6%)에 그쳐 최근 들어 '임금없는 성장'을 기록
-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투자처 부재 등으로 내부 현금성자산 축적이 크게 증가했으나, 고용창출 확대나 급여상승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함
- 향후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을 통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완화 노력과 더불어 가계와

그림40 | 주요 OECD 국가의 DSR 비교



자료 : IMF, 통계청

그림41 | 가계소득 및 임금상승률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기업부문 간의 소득 분배 문제 제고와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 개선 및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

■ **특히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대안 마련과 구조개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**

- 저소득 계층일수록 낮은 신용도로 인해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활용도가 높고, 원리금 분할상환 전환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선 대상이 되며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
- 부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들의 신수종 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

하나 금융정보
Hana Finance Info.

150-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-3
TEL 02-2002-2200
FAX 02-2002-2610
<http://www.hanaif.re.kr>